

#### 4. 정부 정책 동향 (4.1~4.7)

- **세계발전심의위원회, '98 세계개편 방안 (4. 1)**
  - 기업 분할· 합병 관련 세제 지원 강화
  - 환경부담금 소비세 전환 등
- **정부, 보증보험 지급보증분 회사채 연말까지 원리금 보장 (4. 1)**
  - 원리금 지급 보장 제외시 연간 35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 발행 시장 마비 우려
- **공정거래위, 독과점 사업자 지정대상에 금융기관 포함 (4. 2)**
  - 국내 총공급액이 1,000억 원 이상인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% 이상 혹은 상위 3개사 75% 이상 사업장 대상
- **재정경제부, 양도소득세율 대폭 인하 (4. 2)**
  - 부동산 취득에 대한 거래 과세는 줄이고 보유과세는 강화
  - 양도세 감면 및 비과세 대상 축소
- **금융감독위, 부채 축소 비율 업종별 차등화 (4. 3)**
  - 대기업 계열사 부채 비율 200%內 감축은 현실성 부족 인정
  - 국내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 이내로 우선 감축 고려
- **당경, 금융기관 외국인 임원 선임 의무화 (4. 4)**
  -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, 책임경영체제 구축 목적
  -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 조기 시정 장치 개발, 경영 내용 공시 강화, 외부 감사제도 강화 등
- **건설교통부,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전면 해제 (4. 6)**
  - 부동산 경기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전면 해제
- **산업자원부, 원자재 7개 품목 관세 부담 대폭 삭감 (4. 6)**
  - 원자재 수급난을 겪고 있는 7개 품목(알루미늄과, 원피, 봉채칩, 이산화티타늄, 부틸고무, 고속도강봉, 코발트메탈 파운더 등)에 대해 할당 관세율 적용
- **국무회의, 1조 1,119억 원 예비비 실업 대책에 배정 (4. 6)**
  - 공공근로사업 5,119억 원, 실업자 생계 보호 2,000억 원, 생활안정자금 융자 2,000억 원, 직업훈련 확대 1,000억 원, 고용안정 지원 1,000억 원 등
- **공정거래위, 공기업 30대기업 집단 포함 (4. 6)**
  - 포철, 한전 등 공기업도 대규모 기업 집단 선정 대상에 포함시켜 계열사 지급보증 제한 및 상호 출자 금지 등 각종 제재 부과
- **공정거래위, 외국기업 지주회사 설립 전면 허용 (4. 7)**
  - 공정위 승인 절차 간소화로 국내 투자 희망 외국기업 지주회사 설립 허용
- **정부, 모든 이사에 이사회 소집 청구권 부여 (4. 7)**
  -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에 이사회 소집 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권한 확대
  - 우선 사외이사 선임에 누적투표제 도입 검토

(이 보 성: bslee@hri.co.kr, 724-4035)